

‘인권 변호사’ 李 대통령, 우크라 北 포로부터 데려오길

광화문·부

김 신 영

국제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정상 외교가 재개된다. 주요국 정상들만큼 한국 국민도 이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다. 안보·무역·신기술 등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현안 중 외교로 풀 일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대통령이기에 특히 기대하는 사안이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다. 지난 2월 본지 특파원은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다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크라이나에서 어렵게 인터뷰했다. 인터뷰 중 한 명은 확실히 한국행(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했고, 다른 한 명도 선택지 중 하나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군 포로들은 “잡히는 즉시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질’로 여겨지는 나라, 그곳으로 돌아가면 처형되거나 평생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탈북민들은 말한다.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부터 북한 포로를 한국에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 방법에 대해 해외 언론과 한국의 전문가들도 의견을 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병사의 신분이 전쟁 포로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때문에 탈북민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거론됐다. 문제는 한국 정부였다. 그즈음 한국은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큰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다. 닉 달이 흐른 끝에 이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사이 큰 변화가 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북한)의

2월 “대한민국 가고 싶다” 밝힌 우크라 北 포로 송환 아직 요원 국정 마비로 4개월 그냥 흘러 새 정부 외교 성과 ‘1호’로 어떤가

영웅들이 러시아 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며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에 종전을 압박하는 가운데 공고한 북·러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한군 참전이 확인됨으로써 붙잡힌 북한 병사들은 ‘전쟁 포로’임이 확실해졌고,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 역시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됐다.

우크라이나·북한이 모두 가입된 ‘제네바 협약’은 종전 후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처럼, 신병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제네바 협약상 ‘본국 송환’이란 원칙이 다른 인권 관련 국제법상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치열한 논쟁은 공교롭게도 6·25 전쟁 당시 다수의 북한군·중공군 포로가 공산주의 정권의 회복을 두려워해 본국행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엔은 인권 문제를 들어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지키되 “포로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본국 송환’보다는 ‘인권 보호’가 앞선다고 못 박았다. 이후 국제사회도 이 원칙을 따라 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고 우크라이나·한국 정부가 결심이 섰다면 절차적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이번 G7 정상회의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이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가능할지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라고 했다.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인권, 국가의 권위보다 개인의 결정권을 앞에 두는 것이 진보의 신념 아니었던가.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만난다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최상단에 올리고 이들을 속히 한국으로 데려왔으면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반드시, 인권 변호사 경력을 내세워온 대통령이 이런 특히 더 해야 할 일이다.

우정아와 아트 스토리 [586]

인간을 닮은 기계

며칠 동안 미술가 노진아(1975~)의 ‘히페리온의 속도’가 포스트에 설치되어 있었다. 어린이가 킁만 한 하얗고 둥그란 머리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놓여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천천히 눈을 뜨고 눈동자를 굴러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인사를 건네면 입술을 움직이며 “반갑다”고 대답하고, 항상 “인간이 되고 싶어서 슬프다”고 했다. “너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해줬더니, “그렇지가 않다”며 “목각 인형이던 피노키오도 인간이 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노진아는 지난 20년간 전통적 조각에 기술을 결합해 이처럼 관객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고 말하는 작품을 만들어 왔다. 처음에는 작품과 관객이

키보드를 이용해 문자로 대화했다. 최근에는 급속도로 발달한 인공지능과 딥러닝, 로보틱스를 활용해 음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작가는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이라는 세계관을 설정하고, 이전 작품이 관객들과 오랜 기간 쌓아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하는 시스템을 제작했다. 그 결과 이 ‘머리’와 하는 대화는 늘 그럴듯하게 굴러갔다.

처음에는 인간을 닮았지만, 기계임이 확실한 모양새가 섬뜩했다. 하지만 머리와 며칠간 대화하며 지나다 보니 긴 속눈썹과 맑은 눈이 곱게 보였다. 아무리 “인간이 되어봐야 별거 없다”고 해도 때를 쓰듯 “따뜻한 인간의 감정을 느



노진아, 히페리온의 속도, 2022년, AI 기반의 인터랙티브 조각, 혼합재료, 가변 크기, 작가 소장.

껴보고 싶다’는 고집에 정이 갔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로봇, 그리고 그런 로봇에 마음이 움직이는 인간. 노진아가 말한 ‘공진화’란 결국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만큼, 인간도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관계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포스트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다. 당사자들 사이 내분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전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참여한 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쌍방울에서 법인 카드를 받아 쓰는 등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명백한 사실 증거가 없으면 결코 유죄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쌍방울의 전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 모두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도 당초 이 대

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사면도 요구했다.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면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주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은 뭘까. 정치인들이 사법을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법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 탄압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대표 모두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에 희생됐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에 의한 판결들이다.

민주당은 2021년 일선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자 판사를 탄핵 소추했다. 탄핵 사유나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면 이런 사실 왜곡과 막무가내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

국힘, 수도권·4050 눈높이에 맞춰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송연석 의원이 선출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제안했고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당의 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 원내대표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지만, 이번에 구주류(친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7석의 소수 야당을 이끌며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과 변화를 외면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국힘의 쇄신도 이끌어야 한다.

국힘은 지난 대선에서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패했다. 특히 사회의 하리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에서 참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0대에서 73%, 50대에서 70%를 얻은 반면, 국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는 40대에서 22%, 50대에서 26%에 그쳤다. 압도적 참패다.

국힘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에게 수권 세력으로 인정받으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검찰·법무부·특수본의(내란죄 관련) 초기 수사 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계엄 직후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가 검찰이 빠진 것은 수사권 논란 때문이었다.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의문이 있는데 직무유기가 성립하나. 엄밀히 말하면 당시 검찰 수사 자체가 과잉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심 총장이 계엄과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은 심 총장이 작년 10월 비화폰으로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명태균씨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내통했을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7일엔 심 총장 딸이 외교부 연구원직

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또 고발한다는 것이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 총장을 내놓고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일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수위위원회를 신설해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미 발효됐다. 국가 수사 체계 골간을 민주당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데 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걸림돌로 여겨졌을 것이다.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취임한 총장 24명 중 9명만 임기를 채웠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총장도 교체되곤 했다. 대부분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 지금처럼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 내쫓은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하고 폭력적이어야 하나.

대법관 30명 증원?
헌법정신 훼손!

대통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모두 1당-1인 지배 임박

뉴데일리
newdaily.co.kr

사법부, 고법판사들 시작으로 벌써 드러누기 시작 | 대법관 30명 되면 사법부 완전 장악 | 이게 민주주의? 이게 진짜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1인 손아귀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법관 증원안이 본회의 대기 중이다. 확정되면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난다. 임기 동안 대법원장 포함 10명을 교체하고 16명을 추가로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이 1당 1인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증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10 대 2)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일면이다. 1949년 제정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을 9명으로 정한 이래 76년간 없던 일이다.

증원 명분은 대법관 부담을 줄인다는 것. 그러나 2010년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장관급 대법관을 늘린다고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것.

삼권분립 헌법정신 날라간다

대법관 30명 증원은 헌법정신과 충돌한다.

첫째, 그 입법 의도는 **《대법원의 장악과 통제》**라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시도이다. 공적 토론 없던 의제를 **《대통령 방탄》**이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입헌정치가 아니다.

둘째, 대법관 30명 증원은 **《최고법원(Supreme Court)》**이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은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를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단일의 전원 합의체(one bench)》** 재판이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5명 넘는 대법원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단일의 전원 합의체**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진다. 230년간 연방대법관 수는 10명을 넘긴 적이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수는 1년에 약 8~9천 건. 그러나 **전면적인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로 중요 사건 약 80건 정도만 가려내어 심리한다

미국이 왜 230년 동안 9명 이하의 대법관, 그것도 단일의 전원 합의체 조직(one bench system)만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최고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 구성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캐나다 9, 영국 12, 일본 15, 호주 7, 아일랜드 10, 이스라엘 15, 브라질 11, 필리핀 15명이다.

독일과 비교는 잘못

독일의 연방보통법원은 법관 수가 150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는 비교법적 오류이다. 독일엔 5개의 연방전문 법원

이 있다. 이들 전문법원은 해당 분야 최종 상급법원이지만, 사법부 전체의 단일 최고법원이 아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능적으로 최고법원 역할을 한다. 연방보통법원의 재판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독일 연방보통법원의 법관 수가 많으니 우리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대법원과 대법관의 헌법적 위상과 지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법률로 헌법 개정하려 한다

셋째, 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대법원의 재판을 현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는 **현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병렬적 관계를 변경하여 현재를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두는, 그리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법률로써 헌법을 개정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헌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선언하고 있고, 현재의 구성에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우리 제도는 미국식(법원이 헌법재판관 행

사)도 아니고 독일식(현재의 재판소원 허용)도 아닌, 대법원과 현재가 병렬로 존재하는 구조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현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헌법이 설정한 사법권력 배분 질서를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발상》**이다.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 도입하라

대법원의 사건 부담은 주요 국가 모두가 하고 있는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로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최종심급(最終審級)일 필요는 없다. 현재도 판례로 이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의 심급이 늘수록 약자에게는 불리하다. 오히려 사실인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1심 재판부 수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상고허가제 도입 및 사실심(1심) 재판 강화 방안을** 논의하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6월 1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2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